

“촘촘한 주거복지에 역량 집중”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서

부동산 의혹과 관련 “무겁게 받아들여… 송구”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 안정 지속 등 포부도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자신에게 제기된 폼수 증여와 갭투자 등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해 송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국민과 국토위원들이 제기한 부동산 보유 등에 대한 질책을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자질 논란에 휩싸였다.

세종시 반곡동 155㎡ 규모 아파트 분양권(4억973만원)과 서울 송파구 잠실동 59㎡ 규모 아파트(7억7200만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84㎡ 규모 아파트 임차권(3000만원)을 소유했던 다주택자로, 이 중 잠실 아파트는 재건축 아파트를 사들여 1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얻었고 분당 아파트는 지명

직전 자녀에게 증여했다.

이들 아파트·분양권은 세 곳 모두 매입 때보다 수익률이 올랐다. 이 때문에 ‘부동산 투자의 달인’ 국토투기부 장관’ 등의 오명도 생겼다. ‘불법’은 아니지만 주택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 후보자는 주거복지, 교통시스템 개선, 미세먼지 저감, 건설현장 안전 확보, 규제 혁신과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포부도 밝혔다.

그는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품질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 안정세가 보다 확고해질 수 있도록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관리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급행철도(GTX), 광역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버스, S-BRT 등 핵심 교통수단을 빠르게 확충하고 효율화하겠다”며 “평균 90분대가 소요되는 출퇴근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 분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건설현장에서 발

생하는 안전 사고를 막겠다”며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적극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뉴시스

“KAL 858기 희생자 유해 등 인양 위한 수색 나설 것”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서 정동영 의원 질의에… 정부 차원 수색 이뤄질 듯

지난 32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KAL 858기 관련 희생자 유해와 동체 잔해 인양을 위한 정부차원의 수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최정호 국토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토교통부 소속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인사청문 질의를 통해 87년 발생한 KAL 858기 115명 희생자의 유해와 동체 잔해 인양 위한 정부차원의 수색을 촉구했다.

정동영 의원은 인사청문회 질의에서 “스텔라데이지호에 대해서는 국가에 산 48억원을 들여 수색 탐사선을 투입하여 3,400미터가 넘는 심해에서 볼

랙박스를 찾아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32년 동안 동체 잔해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KAL 858기 관련해서는 정부차원의 제대로 된 수색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행위는 ICAO 규정 위반이며, 민간 장관이 되면 미안한 정부에 즉각적인 협의를 요청하고 전면적인 재조사에 들어가야 한다. 스텔라데이지호에 투입된 수색탐사선을 즉각 투입해서 수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정호 국토부 장관후보자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 국토부 역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사고 발생했을 때에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수색을 신속히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정동영 의원이 재차 KAL 858기 희생자 유해와 동체 잔해에 대한 수색에 대한 장관후보자의 입장을 다시 묻자 최정호 장관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정동영 의원은 “최정호 장관후보자가 KAL 858기 희생자 유해와 동체 잔해 수색에 나서겠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이번 기회에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수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민주 안호영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9억7600만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지역 내 초·중·고에 지원되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9억7,600만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완주군 봉동유치원의 다목적교실 증축을 위

한 예산 3억4,700만원을 포함해 완주 고산초교 노후 냉난방시설 개선 1억7,000만원, 완주 상관초교 노후 냉난방시설 개선 1억5,900만원, 장수 산서초교 노후 냉난방시설 및 조명 개선 3억원 등이다.



안호영 의원은 그동안 지역 내 유치원 및 초중고의 교육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김진성 기자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강소성 폭발사고 사망자 위로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은 25일 화학공장 폭발 사고로 7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국 강소성에 위로전문을 보내고 희생자를 애도했다.

송 의장은 서한문을 통해 “지난 21일 강소성 연청시의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큰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는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전북도민을 대표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소성 러우 친지엔 주임과 우정룡 성장께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사고 피해를 수습하고 빠른 시일 내에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믿는다”며 “다시는 이러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한편 전북도의회와 중국 강소성은 1996년 1월 자매결연 이후 23년간 상호 교류를 통해 양 도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북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부분 복귀

이산가족 화상상봉 시작 남북간 단계적 논의 진행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지난 22일 돌연 철수한 지 사흘 만인 25일 부분 복귀했다.

한숨 돌린 정부는 하노이 회담 결정 후 담보 상태에 빠진 남북 교류·협력을 재개하기 위해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시작으로 단계적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에 따르면 25일 오전 8시10분 북측 연락사무소 인원 4~5명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출근해 근무하고 있다. 북측은 이날 복귀하면서 ‘오늘 평소대로 교대 근무차 내려왔다’, ‘공동연락사무소가 공동선언 지향에 맞게 사업을 잘 해나가야 한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는 등 완전 복귀에 무게를 뒀다.

정부는 연락사무소 운영이 정상화되고, 연락관 협의가 가동되면

지난 2007년 11월 이후 약 11년 만의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성사시키기 위해 북측과 협의할 방침이다.

앞서 남북은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위원회는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 관련 물자·장비 반출에 대한 대북제재 적용 면제를 결정했다. 한미 양국도 워킹그룹(실무그룹) 회의에서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에 관한 모든 대북제재를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기점으로 고려 왕궁터인 개성 만원대 발굴 재개 역시 대북 제재 면제 절차를 밟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뉴시스

민주당, ‘김학의 특위’ 구성

홍영표 원내대표 “이쯤 되면 김학의 게이트, 은폐 주체 밝혀야”

2013년 당시 법무부장관 황교안 · 靑 민정수석 박상도 공세도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박상도 한국당 의원을 실명 거론하면서 공세를 퍼붓기도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정권 청와대가 나서서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은근 의압을 행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이쯤 되면 이번 사건을 김학의 게이트라고 불러야 할 것 같다”고 규정했다.

이어 “민주당은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당내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도록 하겠다”며 “검찰은 지난 6년간 이 사건을 은폐 축소해온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누가 지시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당도 공작정치니 표적수사니 하며 본질을 흐도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국민의 법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번 사건을 그냥 덮고 넘어가자는 것이 한국당의 본심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박광운 의원은 “당시 경찰 수사팀이었던 경찰청 수사국장, 수사기획관, 특수수사과장, 범죄정보과장이 정부 교체됐다든 것은 정권 차원의 수사 반대 책동이라는 것을 반증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이 정확히 진상을 밝혀 국민에 소상히 알리는 것이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기대”라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제2의 조연현(전 기무사령관)이 될 수 있었다”며 “출국 금지 조치로 사실상 수사가 시작됐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수사로 본격 전환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매우 커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김 전 차관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해 국민이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당시 법무장관이던 황교안 대표, 민정수석이던 박상도 의원이 역을하다면 오히려 당시 누가 왜 수사를 방해 했나 밝히는데 스스로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이수진 최고위원은 “성범죄 의혹 비호세력의 실체가 드러날까 두려워 해위로 도피하려는 정황이 아닌가 본다”며 “2013년 법무장관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민정수석이었던 박상도 한국당 의원이든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